

‘법 기술자들’의 기교 사법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판결문은 지금 다시 읽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와 논리를 꿰맞춘 ‘기교 사법’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교 내용 중 핵심인 ‘백현동’ 부분은 특히 더 그렇다.

백현동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전 대상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원의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로 상향 조정해 이 사업에 관여한 측근 인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 때 이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다.

당시 발언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으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 방침은 (백현동 등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5곳에 대해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주자는 것이었는데 성남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에서 만약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내가 조금

만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도로공사 부지는 테크노밸리로, LH 부지는 의생명 단지로 개발했다” “백현동 부지는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말라고 버티다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바꿔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전체적으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의미여서 허위라고 기소했다. 국토부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20여 명도 법정에서 “협박은 없었다”

李 후보 선거법 사건 2심 무죄 상식, 대법원 판례와 배치돼 판사가 ‘법 기술’ 부린 것 아닌가 대법관들 판단은 어떨지 궁금

고 증언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발언을 다섯으로 쪼갠 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위치상 “다른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것”이라며 백현동 대상에서 빼버렸다. 그레 놓고 백현동 부지 용도를 “어쩔 수 없이” 바꿔줬다고 한 부분은 ‘의견 표명’이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1심과는 의미를 완전히 달리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발언 맥락과 상황을 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당시 국감에서 질의한 민주당 의원은 ‘백현동 3대 특혜의

혹’이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나와 “다 조작”이라고 하고는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 발언은 그에 대한 답변이었다. 백현동에 대해 묻고 백현동에 대해 답한 것이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를 바꿔줬다는 부지에 백현동은 없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백현동만 없었다고 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는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당시 이 후보 발언을 들은 사람 중에 국토부 협박에 따른 용도 변경 대상에 백현동은 없었다고 생각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2심 판단은 상식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작년 11월 이 후보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후보에게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시인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법정에서 처벌 위협을 감수하면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판사들이 이 후보 앞에서 눈치 보며 ‘법 기술’을 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얼마 전 마중주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법 해석과 적용은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들 판단은 어떨지 궁금하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79]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성 베드로

수업이 흰 노인이 처형당한다. 형리들은 그의 손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있다. 이토록 끔찍한 형벌은 사실 노인 스스로 청한 일이다. 자신은 사히 구세주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자격이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바로 예수의 12 사도 중 첫 번째이며, 초대 로마 교황으로 추앙받는 성 베드로다. 오늘날 교황령의 중심인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은 그의 무덤 위에 세운 것이다.

이 장면은 15세기 피렌체에서 비단 무역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은 브랑카치 가문이 세운 예배당 내부 벽화 중 하나다. 주문자였던 펠리체 브랑카치는 가업을 일으켜 그에게 물려준 삼

촌, 피에트로 브랑카치를 기리기 위해 삼촌의 수호성인이었던 성 베드로의 일생을 예배당에 그리고자 했다. 물론 로마 교황청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벽화 대부분은 피렌체 최고 화가로 떠오르던 마사초가 맡았지만, 마사초는 작업 도중 로마로 떠났다가 요절했다. 이후 수십 년간 미완으로 남았던 벽화는, 필리피노 리피(Filippino Lippi, 1457년경~1504년)가 이어 그렸다.

리피는 수도사이자 화가였던 프라 필리포 리피와 수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합법화될 수 없는 출생이었으나, 그는 교황의 특별 승인 덕분에 별다른 불이익 없이 성장해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담담하고 강렬



필리피노 리피,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 1481~82년, 프레스코화, 피렌체 산타마리아델카미네 교회의 브랑카치 예배당 소장.

한 성 베드로의 모습에는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서, 죄 없는 이들을 감싸안았던 교황의 자비에 대한 조용한 감사가 은은히 깃들여 있는 것 같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통합·경제 행보李, 선거용 아닌 진심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첫 일정으로 국립서 울원충원의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려뿐 아니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 회장 묘소도 참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잊어지지 않게 통합하는 온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 장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안철수 의원 등을 도왔다. 이 후보는 보수 진영 인사들도 다수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 “장관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SK하이닉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공약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경제·통상 위기를 넘을 첨단 기술·산업 육성 전략을 밝히고 탄핵 사태로 인한 국민 갈등을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다만 이런 통합과 경제 행보가 선거용 제스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 후보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곤 했다. 성장을 중시하는 ‘막시즘’ 정당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남아도는 쌀 배급, 노조 편향적인 노란봉투법, 기업들이 반대하는 중대재해법과 상법 개정안, 반도체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 반대 등 포퓰리즘·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였다.

경제 살리기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의면한 채 의의로 나갔다. ‘기본 소득 재검토’ 2주일 만에 기본사회 위원회를 만들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가 추경안에 10조원 지원금을 넣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를 수용할 것처럼 말했지만 노조가 반발하자 입장을 바꿨다.

이 후보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차례 공약했지만 자신의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켜 달라고 했다.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했다. 과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뀔 순 있지만, 대통령이 그 래선 안 된다. 나라와 정책이 방향을 잃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반목과 갈등, 낙후뿐이다. 이 후보처럼 언행 변화의 폭이 크고 빈도가 잦은 경우엔 그런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앞으로 성장·실용·통합을 앞세우고 이념과 포퓰리즘을 멀리하기 바란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 약속을 퇴임 때까지 지켰으면 한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낼 것이다.

韓 대행 출마 명분과 비전이 궁금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한다. 핵심 참모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임했고, 다른 정부직 참모들도 곧 사퇴해 캠프를 꾸릴 것이라고 한다.

한 대행 출마설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관련 질문을 받으면서 본격화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출마를 지지했고 국민 추대위도 출범했다. 한 대행은 “출마 결정을 안 했다”고 했지만 국내 산업 현장을 돌며 외신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과 주한 미군 등 무역·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움직임이었다.

한 대행과 최종 단일화에 유보적이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입장을 바꿨다. 지금은 경선 후보 4명 전원일 최종 단일화를 수용한 상태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나선 뒤 내달 3일 결정되는 국힘 대선 후보와 여론조사 등으로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은 장관·주미 대사·경제 부총리·총리를 두루 거쳤다. 트럼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엎고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풍부한 국정 경험과 통상 전문 지식이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여론조사에선 보수권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임명직 총리와 선출직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자리다. 민주당은 대선을 공정 관리해야 할 심판이 대선에 뛰어드는 건 반칙이라고 한다.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국민도 많다. 그래서 한 대행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6%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 대행은 자신이 왜 출마해야 하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유일한 이유라면 옳지 않고 이재명 당선을 막지도 못할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도 국민 앞에 밝힐 기회가 없었다. 일각에선 ‘당선돼도 개헌을 하고 조기에 퇴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랜 정치 갈등에 지친 국민이 공감할지 불확실하다.

세계 질서는 급변하고 있고, 경제는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 대행은 윤 정권의 과오를 어떻게 극복해 국민을 통합하고 안보 경제 위기를 넘어설 것인지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경제엔 ‘한 방’ ‘뽕족수’ 없다는 걸 보여준 트럼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지던 트럼프는 취임 100일을 맞아 “관세 작동하면 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주가 폭락, 달러 가치 폭락, 물가 급등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경제 대통령’을 기대하며 표를 몰아준 미국 제조업 중심지, 이른바 ‘러스트 벨트’에선 자동차 관세 직격탄을 맞아 해고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농축산물 농가들은 중국의 보복관세 탓에 대두, 돼지고기 수출 주문이 50~70%나 줄어 아우성이다.

일반 국민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는 “내내심을 가지라”고 했지만, ABC·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39%로, 1945년 이후 취임 100일 대통령 지지율로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달러 신뢰도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미 국제 투자를 기피하고 달러 가치는 연일 급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2.7%에서 1.8%로 내렸다.

“미국 경제 역사상 가장 큰 자해극”(래리 서머스 전 재무 장관)이란 비판이 많지만, 트럼프는 “미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100일의 충격과 혼돈이 일기 4년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경제성장의 95%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악몽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의 첫 통상 협상에서 ‘7월 패키지’ 특혜 합의했지만, 미국의 속도전에 말려들지 말고, 협상 타결을 최대한 늦추며 국익 사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를 보며 경제엔 기막힌 묘수 ‘한 방’이란 없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한다. 트럼프는 관세를 ‘아름답다’고 하면서 미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만능열쇠처럼 주장했지만 결과는 반대다. 경제엔 혁신하는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 예측 가능한 정치, 혁신을 가능케 하는 환경 등 근본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한덕수 대행
출마선언 임박

newdaily.co.kr

국힘 단독으로 역부족 ...

만들자! 《반(反) 이재명 광폭(廣幅) 대연정(大聯政)》

이재명만 아니면 그 누구와도 손잡자 | 호남 일부 / 전국 2030 / 김대중 우파 | 이들의 공감·합세·호응 이끌어 내자

▲ 국힘 경선 선두 김문수와 한덕수 대행의 드림팀을 코어로 해서 모든 반 이재명 세력이 연합하면 승산 있다. © 뉴데일리

이거면 구사일생, 지면 천 길 낭떠러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 출마를 선언한다. 6.3 대통령 선거를 놓고 사람들은 왜 한덕수만 이름을 거론할까? 필자도 《김문수-한덕수 / 한덕수-김문수 드림팀》을 주문했다.

자유·보수 우파 국민에게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강제된 현실이었다. 이거면 《구사일생》, 지면 《천 길 낭떠러지》다.

준비돼 있었을 턱이 없다.

며군다나 이쪽은 분열돼 있다. 같은 비(非) 좌파라지만, 《탄핵에 반대한》 측과 《탄핵에 찬성한》 측은 서로 적(敵)이다. 찬성파는 지금도 반대파에게 《사과하라》 겁박한다. 마치 《이재명 쪽 대변인》이라도 됐다는 듯이.

망국으로 가는 최후의 마지막노선

이런 처지에서 국민의힘이 설혹 정통 우파 인사를 후보로 선출한다 해서 그가 과연 이재명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 투지는 물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쪽 머릿수가 이재명 쪽보다 많아야 하는 《산술적 조건》만은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요청에 부응하려면, 자유·보수 우파는 《이재명만 아니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란 대원칙을 천명하고 주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망국으로 가는 최후의 마지막노선》에 서 있다. 이걸 안다면, 지금은 많은 것을 바랄 때가 아니다.

일부는 이것을 《소극적》이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자유인들은 그동안 계속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밀려왔다. 우리 힘의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닌지? 공감하는 사람보다 적대자가 더 많다는 뜻 아닌지?

이런 불리한 조건임에도 《국민의힘 단독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희망 고문》한다면, 그것은 《장렬한 전사(戰死)》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간신히라도 이기지 못하는 길》일 것이다.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야 할 《구사일생의 혈로(血路)》는?

국힘 1위 + 한덕수 + 이낙연 + 또, 또, 또

바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대타협일 수 있다. 《과도적 대연정(大聯政)》을 향한, 다수가 편차는 《반(反) 이재명 광폭(廣幅) 대연정》!

이 응급처방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마다할 리 없다. 이낙연 바른미래당 상임고문도 호응했다. 한덕수 대행 주변에서도 《1~3년 단기 정권하의 개헌》을 전제로 출마할 것이라 했다.

이류근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5년 4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50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